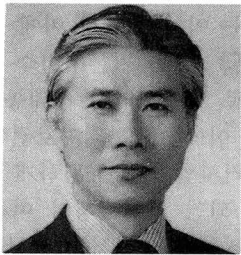


情報通信 産業 技術 발전 방향



金 元 模
〈(주)디지콤 대표〉

■ **약력**

- ▲서울대 법대 졸
- ▲한진전자 부사장
- ▲(주)디지콤 대표이사(현)

한 미무역협상이 벼랑끝에 어렵게 타결되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이외에서 실은 미국측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인 셈이 되었다. 통신분야에 대한 협상이 남아 있지만 필시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이제 활짝 열려진 문으로 홍수처럼 들어올 미국과 일본의 기술제품을 어떻게 막느냐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경제가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악화, 고임금으로 인한 생산비양등, 시장개방압력으로 치열해진 외국제품과의 경쟁,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등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기술모방의 체질을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자체 기술개발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더우기 시장개방 이후 한국의 갈 길은 기술력향상뿐이며 심지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개편도 자체기술능력 없는 모방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히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대학을 중심으로한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2천5백억원의 연구기금을 내년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 있고, 또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자금 3천억원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는 소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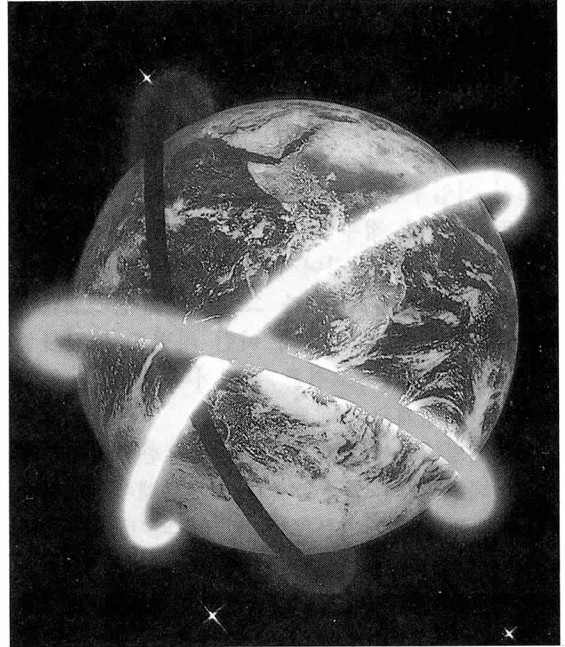
정부와 관련기관의 이 모든 의욕적인 계획이나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제도와 관행은 진실로 21세기를 향한 첨단기술창출에 합당한, 효율적이고 의욕적인 제도인가 실무적인 면에서 자문해볼 필요가 있지않은가 한다.

우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집중적 지원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산업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된다. 산업기술개발은 기초과학연구만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으니, 그것은 기술개발의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새로운 기술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수요를 예상한 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생산원가의 절감 등 광범위한 것이며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술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으면 그 성과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확대에 기여해야하는 것이 순리이고, 기업의 이윤증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속적 기술개발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런 연유로 해서 기초과학연구투자는 정부가 주로 맡고 산업기술개발은 기업이 담당하는 소박한 발상도 있을 수 있으나 원천기술이 워낙 취약한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은 기초과학연구와 산업기술개발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도록 추진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지원이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도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국책과제 내지 특정 연구프로젝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독과점식으로 발주되고 있는 현실은 자유경쟁에 의한 연구성과의 효율적 증대와 소요연구비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민간연구소와의 자유경쟁을 통한 연구과제의 발주가 보편화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자유경쟁의 논리는 바로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발전과 성장의 진리이며 국책연구개발분야라고 해도 미국의 많은 연구소가 그러한 것처럼



이 자유경쟁의 원리에 충실한 때에만이 필요한 연구성과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 걸음 나아가서 차제에 정부는 오로지 개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사설연구소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개발의 다변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의 대기업집중을 방지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의 구조적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권한다.

예를 들어 근래 우리사회의 첨단기술분야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모험기업 가운데는 연구용역사업만을 전문영업으로 하는 기업형의 사설연구소가 창업되고 있고 또 상당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연구용역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기본법은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범위기준 등에서 업종분류에 대한 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도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영업내용에 있어서 엄연히 중소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에 포함시킨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으로서의 각종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물론이고 해당 금융 및 조세관계 실무자들도 업무집행에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적용단가가 종전보다는 많이 인상되었으나 아직도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에는 훨씬 미흡한 것으로서 기업부담임금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겠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보전비산정에 있어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이외의 연구소간에 심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런 차별도 민간시설 연구소의 연구의욕고취를 위해서나 형평의 원리에서 보나 철폐되어야 하겠다.

기술개발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인력인데 근래의 연구과제가 소프트웨어작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므로써 연구비의 60%~70% 이상이 이들의 인건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30%~40%가 재료비 기타에 소요되는 실정임에도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인건비기준은 총연구비의 30% 전후에 머물고 있으므로써 과거 하드웨어 위주의 인건비산정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인건비구조하에서는 실질적인 산업기술개발이나 고급연구인력확보는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또 국내개발기술제품에 대해서는 도입기술제품과의 경쟁에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겠다. 중소기업

업이나 민간연구소에서 애써 개발한 기술제품의 국내시장이 낙관시되면 이에 착안한 대기업이 외국에 거액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기술이전(실은 조립기술에 불과하지만)으로 들여온 제품으로 과당 경쟁을 하는 경우 국내산업기술의 개발은 설 땅이 없게 된다.

흔히 국산기술제품이 외국산보다 비싸다는 평을 하는데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 우리에게 축적된 산업기술이 있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었는가?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모든 기술능력을 세계최고 수준에 올려놓으려는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서구산업사회가 2백년 이상 걸려 구축한 산업기술을 우리는 불과 40년~50년으로 이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 원천기술보다는 조립기술습득과 모방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산업기술의 갈증을 해소해 왔으나 이제 원천기술의 확보없이는 우리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거니와 원천적인 산업기술의 개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시설연구소를 포함한 연구소의 다변화와 상호간 균형적 활성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산기술에 대한 애정어린 이해와 인내심이 모든 정책입안자와 집행자와 산업계 지도자들 가슴에 사명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선진기술의 신속한 전달 등 정보전달 기능을 다할 본지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제한 없음.
2. 길 이 : 제한 없음
3. 마 감 : 매달 10일
4.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한국데이터통신사 옥 1204호 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화사회 담당자 앞.
(TEL : 796-6444, 6555)

5. 유의사항 :

- 가급적 200자 원고지를 사용하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도표나 사진등의 자료를 첨부.
- 외국어는 국문으로 번역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괄호 안에 국문번역을 병용.

6. 기 타 :

- 필자의 사진(명함판 또는 반명함판) 1장과 필자소개서, 연락 전화 번호 명기.
- 고료를 우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장번호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기.